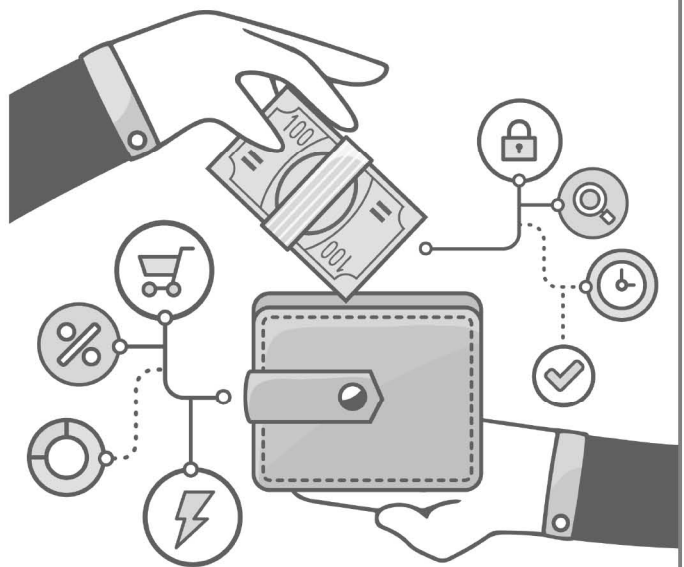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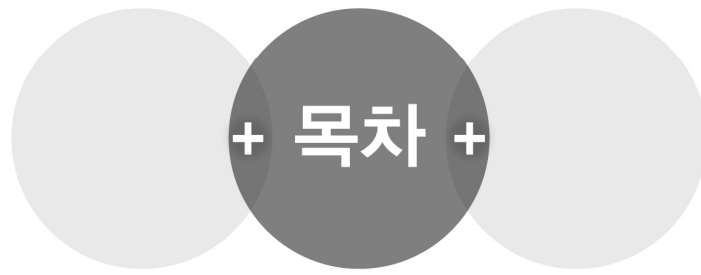


2018년 빈발질의 기관 대상 워크숍

2018. 9. 7(금)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



국민권익위원회



1. 청탁금지법 FAQ 1

2.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17

1

청탁금지법 FAQ



▪ 사례 1. 적용대상(제2조)

Q.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일반사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1

▪ 사례 2. 공직자등의 배우자(제8조제4항)

Q. 우리 회사(민간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 선물, 경조사비(30만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받아도 될까요?

A.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 사례 3. 공무수행사인(제11조)

Q.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해석 상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해석 상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4. 부정청탁(제5조)

Q.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받나요?

A. 법 제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사례 5. 취업추천(제3호)

Q. 대학교수가 민간 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사례 6. 인사고충 및 상담(3호 관련)

Q.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 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금품등 수수 없음)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령 위반** (제9호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도 포함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희망부서 및 승진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례 7. 계약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7호 관련)

Q.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乙을 통해 계약 담당 직원 甲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제7호).

A는 제3자(乙)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 제1항, 제23조 제3항).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

甲은 乙의 부정청탁에 따라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사례 8. 골프장 및 콘도 예약(9호 관련)

Q. 직무관련자가 공공기관에서 소유한 골프장의 예약 또는 공공기관 소속 콘도형 연수원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특정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9호)

· 사례 9. ‘공개적으로’의 의미(예외사유 2호 관련)

Q. A부처에서 B공공기관에 ‘대국민공개’로 협조 공문을 시행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서의 ‘공개적으로’는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대국민 공개로 설정할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 사례 10. 금품등 수수, 선물(2호)

Q.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담당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기로 한 후 담당 경찰에게 4만 5천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나요?

A.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위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청탁 여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의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 등의 직무의 내용,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례 11. 선물(2호)

Q. 직무관련자가 내방 시 부서에서 부서원 10명이 나눠먹으라고 5만 원의 간식을 가져왔을 시,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인당 5천 원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A. 직무관련자가 가져 온 5만 원 상당의 간식은 청탁금지법령상의 '선물'에 해당하고, **특정 부서원에게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로 가져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제공하는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례 12. 상품권 제공(2호)

Q.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권의 선물**을 받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사례 13. 식사, 선물(2호)

Q.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A. 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례 14. 경조사비(2호)

Q.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경조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수수해야 하나요?

A.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1회 1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5만원)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5. 경조사비(2호)

Q. A중앙부처는 해당 부처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甲의 부친상에 부의금 5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회기중이 아닌 경우)?

A. A중앙부처(기관장)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국회의원 甲은 금품등의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1).

· 사례 16.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Q.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지역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A.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이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의 경우 그 후원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법 제8조 제3항 제8호)

또한,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허용(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사례 17. 친목단체의 기준에 따른 금품등(5호)

Q. 전국○○학교 교감협의회(친목단체)의 규약에 따라 승진·전보 시 5만 원 상당의 축하난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순수 친목단체로서 각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회비로 구입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로 구입하는 것은 아님

A. 전국○○학교 교감들 사이에는 통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2항 참조)

다만, 교감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또한, 사안의 교감협의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협의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8. 공식적 행사(6호)

Q.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A.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유(제6호)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을 위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편의·식사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9. 사회상규(8호)

Q.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 (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사례 20. 사회상규(8호)

Q.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A.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1. 사회상규(8호)

Q.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사례 22. 사회상규(8호)

Q. ○○도 체육회에서 출입기자단을 위하여 체육회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지원** 등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사례 23. 사회상규(8호)

Q. ○○광역시 체육회에서 취재 기자에게 경기 관람권을 배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A.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제공받아 공연·행사를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은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다만, 양도·대여 불가)

▪ 사례 24. 사회상규(8호)

Q.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동료에게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A. 기념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8호)

* 기념패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

▪ 사례 25. 외부강의등(제10조)

Q.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26. 외부강의등(제10조)

Q.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2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1

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 되나요?

A.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2

Q.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 서는 안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하므로 안됩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3

Q.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4

Q.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5

Q.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6

Q.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7

Q.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8

Q.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A.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9

Q.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9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법원 관내 변호사	해당 법원 소속판사	2만8천원	4배 부과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만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만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만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만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천6백원	2배 부과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10

Q.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A.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이전과 같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법 제8조 제3항 제2호)로, 다른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

Memo



Memo



Memo



Memo

